

1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상적 기술을 가진 조직의 경우 높은 공식화 구조를 가진다.
- ② 조직구조의 형태를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환경이 복잡하고 불안정한 경우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
- ④ 조직구조는 조직 내 여러 부문 간 결합의 형태로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는 관련성이 없다.

해설

①③ (○) • 조직구조의 상황변수와 기본변수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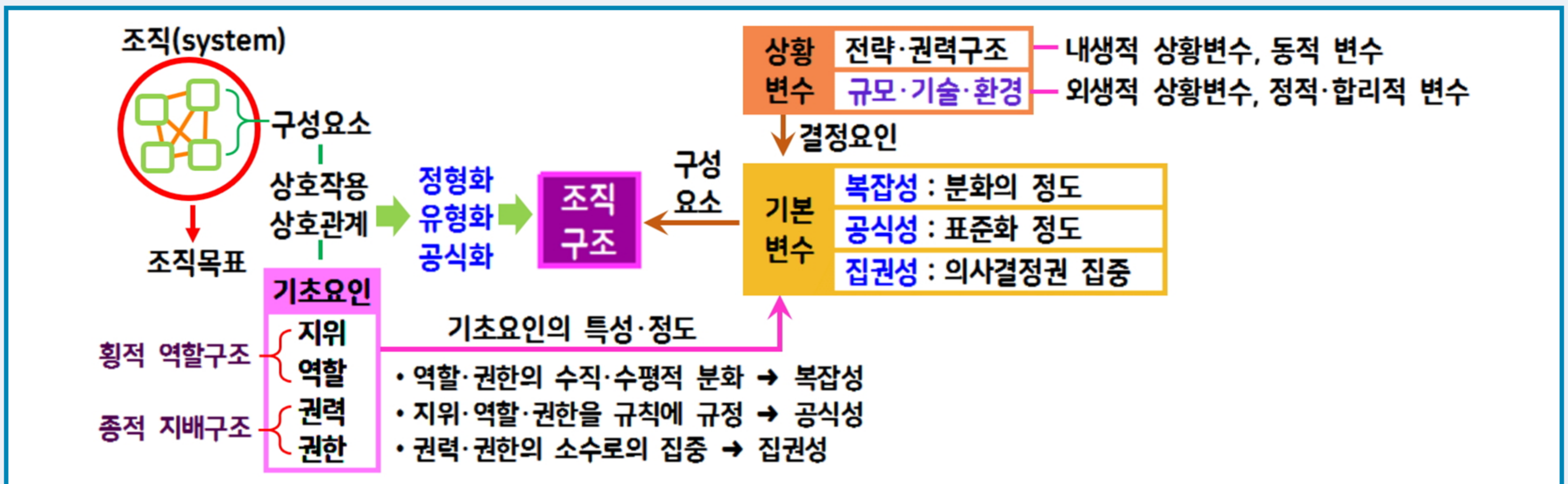
기본변수	상황변수	규모		기술		환경	
		대규모	소규모	일상적(정형적)	비일상적	확실	불확실
복잡성	↑	↓	↓	↓	↑	↑	↓
공식성	↑	↓	↓	↑	↓	↑	↓
집권성	↓	↑	↑	↑	↓	↑	↓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②(○) 조직 유형은 연속선상에서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를 양극단으로 하여 분류된다.

폐쇄적·기계적·정태적 조직구조	합리체제 모형	안정된 환경 명확한 목표	획일적·불변적 기술 이용	반복적 업무 정형화된 의사결정	구조적·계층적인 조정과 통제과정
개방적·유기적·적응적·동태적 조직구조	자연체제 모형	불안정한 환경 다양하고 가변적인 목표	복잡하고 동태적인 기술 이용	창의적·쇄신적 업무 비정형적 의사결정	상호적·신축적인 조정과 통제과정

④ (×) 조직구조 : 조직 구성원 간 유형화된 상호작용, 조직을 구성하는 부문들 간의 확립된 관계의 유형.



답 ④

2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앨더퍼(Alderfer)의 욕구내용 중 관계욕구는 머슬로(Maslow)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에 해당한다.
- ②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 ③ 허즈버그(Herzberg)는 위생요인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 ④ 애덤스(Adams)는 투입한 노력 대비 얻은 보상에 대해서 준거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함의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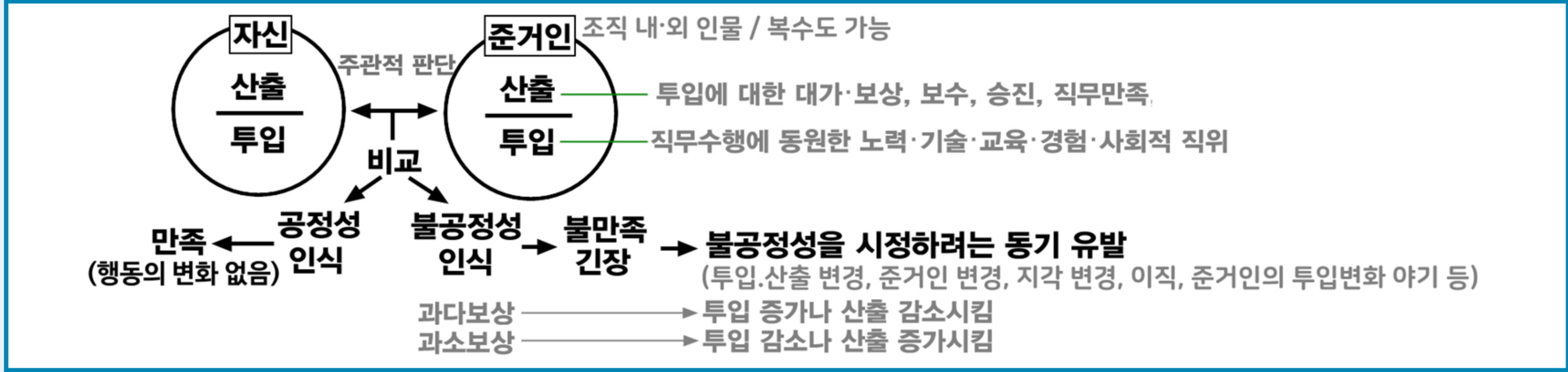
해설

① (×) 앨더퍼(Alderfer)의 욕구내용 중 관계욕구 : 머슬로(Maslow)의 존경욕구 중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자존심 + 사회적 욕구 + 안전욕구 중 대인관계차원의 비물질적 안전

• 앨더퍼(C. Alderfer)의 ERG이론 : Maslow의 다섯 가지 욕구계층의 범주를 세 가지로 통합. 욕구의 구체성·추상성 정도(구체적인 생존욕구에서 추상적인 성장욕구까지)와 무엇에 대한 욕구인가(생존-대물[對物], 관계-대인[對人], 존재-자신[自身])에 따라 범주화.

자아실현욕구	성장욕구(Growth)	자기발전	자신	자아실현욕구 + 존경욕구 중 자기로부터의 존경, 자긍심
존경욕구	관계욕구(Relatedness)	대인관계	타인	존경욕구 중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자존심 + 사회적 욕구 + 안전욕구 중 대인관계차원의 비물질적 안전
사회적 욕구				
안전욕구	생존·존재욕구(Existence)	육체적 생존	물질	생리적 욕구와 물질적·물리적 안전욕구
생리적 욕구				

④ (○) 아담스(J. Adams)의 공정성(형평성) 이론(Equity Theory)



답 ①

3 2022년 10월 14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단,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 ① 2021년 10월 13일에 성년후견이 종료된 甲
- ② 파산선고를 받고 2021년 10월 13일에 복권된 乙
- ③ 2019년 10월 13일에 공무원으로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丙
- ④ 2017년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2019년 10월 13일에 끝난 丁

해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x)**
*2021.1.12.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고,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피한정후견인을 임용결격사유에서 삭제함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횡령·배임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⑧ **다음 해당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⑨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2호)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2022년 10월 14일 기준

- ① 2021년 10월 13일에 성년후견이 종료된 甲 →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이지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용 가능**
- ② 파산선고를 받고 2021년 10월 13일에 복권된 乙 →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지만 복권되었으므로 **임용 가능**
- ③ 2019년 10월 13일에 공무원으로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丙 → 징계로 파면처분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임용 불가**
- ④ 2017년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2019년 10월 13일에 끝난 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날 부터 2년이 경과 했으므로 **임용 가능**

답 ③

4 정실주의와 엽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적제로 전환을 위한 영국의 추밀원령은 미국의 펜들턴법보다 시기적으로 앞섰다.
- ② 엽관제는 전문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정부관료의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③ 미국의 잭슨 대통령은 엽관제를 민주주의의 실천적 정치원리로 인식하고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였다.
- ④ 엽관제는 관료제의 특권화를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현재도 일부 정무직에 적용되고 있다.

해설

- ① (○) 영국은 1853년 Northcote-Trevelyan보고서, 1855년 1차 추밀원령으로 실적주의 기반 조성, **1870년 2차 추밀원령으로 실적주의 확립**(공개경쟁채용 시험제도 도입). 미국은 1883년 펜들턴법을 통해 실적주의 확립(공개경쟁채용시험제도 도입).

- ② (x) 전문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정부관료의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실적주의이다. 업관주의는 비전문가인 정치인을 임용하므로 공직의 질을 저하시키고, 행정의 비능률성(비효율성)·비전문성 초래하였다.
- ③ (o) 서부개척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은 서민 출신의 7대 잭슨(A. Jackson) 대통령은 공직을 널리 민중에게 개방하고 선거공약이나 정당이념을 강력히 이행하며, 참신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한다는 민주적 신념으로 정권교체에 따라 공무원을 경질하는 업관주의를 1829년 도입(서부개척민과 하위계층민의 평등주의적 가치관 반영).
- ④ (o)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적제를 기본으로 하며 민주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상위직에 업관주의적 인사를 신축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 상위직은 집권자와의 정치적 이념의 공유를 통한 정책추진을 위해 업관주의가 필요하며, 단순 근로직이나 특별한 신임이 필요한 직위는 업무성격상 공개경쟁이 어렵거나 불필요하므로 업관주의가 적합하다.

답 ②

5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제의 원리에 의해 체계가 확립된다.
- ② 업무에 대한 훈련을 받고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관료가 업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한다.
- ③ 훈련된 무능은 관료가 제한된 분야에서 전문성은 있으나 새로운 상황에서 적응력과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 ④ 동조과잉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과업을 찾아서 실행하기보다 현재의 주어진 업무만을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해설

- ① (o) **계층제[계서제]** : 모든 직위는 피라미드식의 계층 내에 배치되며 상위 계층은 질서정연한 명령복종체계 구성(엄격한 수직적 업무배분)하고 실적에 대해 한 명의 상관에게 책임을 짐. 계층제의 상명하복체제는 집권적 구조를 형성하고 업무능률을 높이며 정책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함. 또한 질서유지와 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계층제를 통한 승진은 권력욕구와 성장욕구를 만족시킴.
- ② (o) **능력(기술적 전문성)에 의한 채용** : 모든 직무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닌 관료가 담당하며 관료의 채용은 세습이나 정실이 아닌 기술적 전문성(정치적 전문성 x)이나 전문능력에 의해 시험·자격증 등 기술적 기준을 통해 공개적으로 채용. 관료는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권위에 의해 임명되며 관료적 권위의 지배를 받음.
- ③ (o) **전문화로 인한 무능,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 : 한 가지 분야의 지식·기술에 대해 훈련받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은 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새로운 조건이나 변동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이 촉진됨.
- ④ (x) 적극적으로 새로운 과업을 찾아서 실행하기보다 현재의 주어진 업무만을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무사안일주의**이다.
동조과잉(overcomformity)과 목표·수단의 전환(대치) 현상 : 동조과잉이란 본래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규칙의 준수가 형식주의를 초래하게 되어 그 자체가 목표로 되는 현상. 목표달성을 위한 규칙·절차의 준수를 강조할 경우 규칙·절차에 지나치게 영합(迎合)·동조하게 되어 규칙준수를 절대시하게 되는 동조과잉을 통해 목표전환을 초래하며 외형만 중시하는 양적 복종 현상(본질적 목표보다 수량적·형식적 목표달성에 치중) 발생. 동조과잉은 목표와 수단의 전도, 법규만능사상, 구태의연, 선례답습주의, 무사 안일, 책임 회피, 창의력의 결여 등을 조장하고 쇄신을 저해하는 조직풍토를 조성.

답 ④

6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② 직무의 특성, 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으로 구분한다.
- ③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으나,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는 없다.
- ④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 ③ (x) 임용권자는 직제·정원의 개정·폐지로 인해 해당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 임용 가능.
- ④ (o) 2024년부터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는 필요없게 됨.

전문경력관

개념	계급 구분과 직군·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임용령을 개정(2013.12.12. 시행)하고 「전문경력관 규정」을 제정하여 기존 별정직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신설한 직위.	
지정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 가능.	
구분	직위군 구분 : 직무의 특성·난이도와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에 따라 가군(일반직 5급 이상에 해당), 나군, 다군	
신규채용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시보임용기간은 가군 1년간, 나·다군 6개월간	
인사관리	전직	임용권자는 직제·정원의 개정·폐지로 인해 해당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 임용 가능.
	전보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된 경우에는 해당 전문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 가능.
	근무성적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함.
	징계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은 적용 안함.

2022년 국가직 7급 행정학

■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

구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과거 공직분류	별정직 공무원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계약직 공무원
지정요건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 직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
근무기간(임기)	.	있음(5년 이내, 단 한시임기제는 1년 6개월)
신분보장	정년까지 신분보장 ^{*1)}	임기 동안에만 신분보장
구분	가군·나군·다군 - 직무의 특성·난이도, 직무 숙련도 기준	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
직군·직렬·계급(직급)	없음	있음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가(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	4급 이상: 성과계약등 평가, 5급 이하: 근무실적평가
유사점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 징계 유형 중 강등은 적용 안 됨	

■ *주1) 전문경력관이 정년까지 신분보장이 된다는 직접적인 법령 규정은 없지만, 일반직 공무원이므로 정년까지 신분보장이 됨

답 ③

7 다음은 동기부여 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가) ~ (다)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유치원 어린이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고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하였다. 첫 번째 집단에는 그림을 완성하면 선물을 준다고 약속하였고 그림을 완성한 어린이들에게는 약속한 선물을 주었다. 두 번째 집단에는 선물을 준다는 약속은 없었지만 그림을 완성한 어린이들에게는 깜짝 선물을 주었다. 세 번째 집단에는 어떤 약속도 선물도 없이 평소처럼 그림 그리기를 하였다.

그 이후, 그림 그리기 놀이를 계속하는지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 두 번째와 세 번째 집단은 그림 그리기 놀이를 계속하였지만 첫 번째 집단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만이 그림 그리기 놀이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학자들은 ㉠ 동기가 ㉡ 동기를 밀어내는 구축효과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 동기의 예시로는 ㉣을/를 들 수 있다.

	㉠	㉡	㉢
①	내재적	외재적	성과급
②	내재적	외재적	가치관 일치
③	외재적	내재적	처벌
④	외재적	내재적	일에 대한 즐거움

해설
그림 완성시 선물은 외재적 보상이며 이에 따라 그림을 완성한 경우 외재적 동기의 작용. 외재적 보상과 무관하게 그림을 완성한 경우는 내재적 동기의 작용. 첫 번째 집단은 '선물'을 주다가 더 이상 주지 않은 경우 그리기 놀이가 줄어들었으므로 외재적 동기가 내재적 동기를 밀어내는 구축효과(驅逐效果)가 있음. 내재적 동기의 예시로 ㉣ 항목에 가치관 일치나 일에 대한 즐거움이 들어갈 수 있음. 성과급이나 처벌을 외재적 보상이나 처벌에 따른 외재적 동기와 관련됨.

답 ④

8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동일 정책대상집단에 대해 정책집행을 기준으로 여러 번의 사전, 사후측정을 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단절적 시계열설계'는 준실험설계 유형 중 하나이다.
- ㉡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역사요인은 정책집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정책대상이 사람일 때 주로 나타나며 시간의 경과 때문에 발생하는 조사대상 집단의 특성변화가 정책의 효과에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 ㉢ 정책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 통계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정책효과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을 비실험적 정책평가설계라고 하며 회귀분석이나 경로분석 등이 있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 (○) **준실험설계의 유형** : 비동질적 비교집단설계, 사후측정 비교집단설계, 회귀불연속 설계, 단절적 시계열 설계
- ㉡ (×) 성숙(성장)요인에 대한 설명임.

성숙(성장)요인 (maturation)	정책실시기간 동안 시간경과로 발생하는 대상집단의 자연적인 특성 변화 가 결과변수에 영향 (예 노인복지정책실시와 노인건강증진의 관계 측정시 정책과 무관하게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됨을 간과한 경우, 우유급식과 성장발육의 관계 측정시 우유급식과 상관없이 청소년의 자연적인 성장이 있는 경우). 측정 전후 시간간격이 길고 정책대상이 사람일 때 주로 나타남.
역사(사건)요인 (history)	사건(실시 전검사와 사후(실시 후)검사 기간 동안 연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연구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재적 사건의 발생 (조사기간 중에 정치·경제·사회 및 자연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 조사기간이 길수록 사건의 개입가능성은 커짐 (예 수질정화장치 설치와 수질개선의 관계 측정시 중간에 폭우가 내려 오염요소가 제거된 경우, 도로교통시설 확충과 교통체증 개선의 관계 측정시 중간에 지하철 개통이나 유가 상승 발생. 공장폐수정화시설 설치정책을 1년 간 실시 후 강물 오염도 측정시, 극심한 경기침체로 공장 폐업이 증가하여 오염이 감소한 경우).

㉢ (○) 비실험설계 중 통계적 비실험(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제3의 변수들을 식별하여 통계분석모형에 포함시킨 후 정책효과를 추정).

답 ②

9 중앙정부의 지출 성격상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지방교부세
- ㉡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분담금
- ㉢ 정부부처 운영비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국채에 대한 이자지출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해설

중앙정부 지출은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과 재량지출이 있으며 ㉤은 의무지출이 아니다. ㉠㉡㉢㉣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의무지출 유형으로 규정.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등) ③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2.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
 3.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 국제기구분담금은 회원국이 부담하기로 동의한 부담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분담금'과 특정 목적의 사업 추진·운영을 위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사업분담금'이 있다. 유엔분담금 중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 PKO)예산 분담금은 각국의 총 국민소득과 일인당 국민소득을 고려하여 부담률을 산정하고, 매 3년마다 결정한다. 반면 사업분담금의 부담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각국 관심분야에 따라 기여액이 결정된다.

답 ③

10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기준예산제도는 예산배분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서 미국의 민간기업 Texas Instruments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되었다.
- ②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 계획, 사업, 예산을 연결시키는 제도로서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등 정부예산이 팽창하던 1960년대에 도입·운영되었다.
- ③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산출 이후의 성과에 관심을 가지며 예산집행의 재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로서 1950년대 연방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에 확산되었다.
- ④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해 편성하는 통제지향적 제도로서 1920년대 대부분 미국 연방 부처가 도입하였다.

해설

- ① (○) **영기준예산(ZBB)** :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에서 벗어나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조직체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대해 영기준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BC분석, EC분석)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과 활동을 선택하여 예산을 결정하는 감축지향적 예산제도. 1969년 파히르(Pyhrr)에 의해 민간기업(Texas Instruments)에 경영난 극복을 위해 도입. 1973년 카터(Carter)에 의해 조지아 주에 도입, 1977년 카터 대통령이 연방정부예산에 도입. 1981년 레이건(Reagan)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지만 전면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며 PBS와 함께 현재까지도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② (○) **계획예산제도(PPBS)** : 장기적 계획수립(planning)과 단기적 예산편성(budgeting)을 프로그래밍(programming)을 매개로 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행하려는 계획지향적 예산제도. 965년 존슨(Jhonson) 대통령에 의해 연방정부에 전면 도입.
- ③ (×) 성과주의예산(PBS ; Performance Budget System)은 뉴딜정책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부기능이 확대되고 정부사업의 수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정부사업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에서 Truman 정부 때 1949년 1차 후버위원회의 권유로 1950년 의회가 예산회계절차법을 제정하여 연방정부를 비롯한 주 및 지방정부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산출(output) 이후의 성과(결과 : outcome)에 관심을 가지며 예산 집행의 재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는 신성과주의예산(NPBS)이다. 성과주의예산(PBS)은 투입이 성과로 이어진다는 단선적 가정 아래, 업무 활동, 등 직접적 산출(output)에 관심을 가진다.

구 분	성과주의 예산(PBS)	신성과주의 예산(NPBS)
시 대	1950년대 행정국가를 배경	1980년대 신행정국가(탈행정국가)를 배경
관심대상	투입(inputs)과 산출(outputs), 비용정보와 업무·활동의 연계 예산액 = 업무량 × 단위원가	산출(outputs)과 결과(outcomes), 사업·활동과 결과(성과)의 연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행정이념	능률성	능률성 + 효과성
투입 - 성과에 대한 경로가정	투입 - 업무수행 - 산출 - 성과간의 인과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단선적 가정'	투입이 자동적으로 의도한 성과나 영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복선적 가정'
성과책임	창출한 성과에 따른 정치적·도덕적 책임	구체적 보상적 책임(성과에 대한 유인과 처벌)
자율과 책임	자율보다는 통제와 감독을 기본으로 한 개혁	자율과 책임의 유기적 연계

④ (○) **품목별 예산제도(LIBS)** : 예산을 투입요소인 지출대상(품목)별(인건비, 소모품비, 출장비 등)로 분류하여, 지출대상과 그 비용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통제지향적·투입지향적 예산제도. 20C초 미국 정부운용의 부정부패를 막으려는 진보주의 운동으로 등장. 1912년 능률과 절약을 위한 대통령위원회(태프트 위원회)의 권고로 1921년 예산회계법 제정과 함께 행정부제출예산제도가 확립되면서 대부분의 연방부처에 도입.

답 ③

11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과 경영이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는 공사행정일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 ② 의사결정 역할을 하는 정치와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행정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③ 윌슨(Wilson)은 행정을 전문적·기술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대공황 이후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의 정책결정·형성 및 준입법적 기능수행을 정당화하였다.

해설

④는 정치·행정일원론(통치기능설)의 특징임.

■ 행정관리론(정치·행정2원론)과 통치기능설(정치·행정1원론)

19C말 행정국가화		20C초 현대행정국가	
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로 전환(자본주의 발달) - 도시화와 도시문제의 증가에 따른 행정활동의 증가 - 기업 간 경쟁 심화와 과학적 관리론 의 등장		① 자본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 로 전환 - 1930년대 세계대공황 과 정부의 적극적 개입 확대 - 1930년대 새로운 관리기법의 요구와 인간관계론 대두	
② 업관주의의 폐해 (비능률·비전문성, 정당의 사병화)에 대한 대응 - 실적주의 등장, 기계적 능률성 강조 - 행정관리론 대두(행정의 탈정치화)		② 실적주의의 한계와 인사행정의 적극성 필요 ③ 사회적 능률성 (민주성·인간성) 중시 ④ 통치기능설 대두(행정의 정치적 기능 인정)	
↓		↓	
1880년대 행정관리론(기술적 행정학) : 고전적 행정학	행정개념	1930년대 통치기능설(기능적 행정학) : 신고전적 행정학	행정개념
행정은 정치와는 다른 공공사무의 관리(경영성 강조) 인사·재무·조직관리 등 경영과 유사(전문성 필요)	행정 vs 정치·경영	행정은 통치기능(정치성도 지님) 정책결정기능(정치기능) + 정책집행기능(행정기능)	행정 vs 정치·경영
정치·행정2원론(행정의 정책결정기능 부인) / 공·사행정1원론	행정이념·가치	정치·행정1원론(행정의 정책결정기능 강조) / 공·사행정2원론	행정이념·가치
기계적 능률성 , 가치중립성(사실판단 중시)	배 경	사회적 능률성 (민주성, 인간성), 가치판단성	배 경
산업사회 등장과 19C말 행정기능 증대 업관주의의 폐해(비능률성) 극복 필요성		1930년대 시장실패(세계대공황)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 요구, 현대행정국가	

답 ④

12 정부실패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X-비효율성'은 정부가 가진 권력을 통해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 ② '지대추구'는 정부개입에 따라 발생하는 인위적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활동이다.
- ③ '파생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다.
- ④ '내부성(internalities)'은 공공조직이 공익적 목표보다는 관료 개인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해설

- ① (×) • 권력과 특혜에 따른 가치분배의 불평등(분배적 불평등 ; distributional inequality) - 권력의 편재(偏在) : 시장활동에서의 불공평 문제는 개인들의 소득과 부에 관한 것이지만, 정부정책으로 인한 불공평성은 권력과 특혜로 나타남. 즉, 정부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 편익은 권력에의 접근가능성의 차이, 개인 소득의 차이, 기업규모의 차이, 지역의 차이에 따라 각 개인에게 서로 다르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정부활동 결과에 따라 득을 보는 사람(권력과 특혜를 부여받는 쪽)과 손해를 보는 사람(권력과 특혜를 박탈당하는 쪽)이 발생. 소득분배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공공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권력과 특혜에 따른 분배적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은 포획이나 지대추구 등 권력의 편재로 이어짐(예) 그린벨트 내에 호화별장의 건설허가, 상수원 근처에 골프장 건설허가).
- X - 비효율성(X - inefficiency) : 서비스 공급이 독점적인 경우 경쟁의 압력을 피할 수 있으나, 조직 내 경영자원을 능률적으로 사용할 유인(誘因)을 잃게 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측면. 경쟁의 부재로 인한 관리 및 경영상의 비효율로 X-비효율성이 나타나면 생산량은 줄고 비용은 증가되며, 사회의 후생손실을 초래. 정부나 기업이 방만하고 나태한 경영으로 인해 경영상의 효율성 추구 노력이나 유인(incentives)이 감소되어 나타나는 비효율성으로서, 법적 제도적 요인이 아닌 심리적 행태적 요인(사명감·직업의식의 부족)에 의해 나타나는 관리상·경영상 비효율성을 의미함(예) 무사안일한 근무성향, 소극적인 근무태도).
- ② (○) 정부의 경쟁적 규제정책(진입규제, 인허가제) ⇨ 제도적 독점 형성, 지대발생 ⇨ 이익집단·기업의 지대추구행위 ⇨ 사회적 손실 발생(시장실패에서의 독점에 비해 사회적 손실이 더 큼)

지대 (rent)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는 데 따라서 정상이윤(기회비용) 이상으로 얻게 되는 초과이윤. 경쟁체제에서는 초기에 지대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기업의 참가에 의해 생산증가 및 가격하락으로 곧 소멸하지만 비경쟁체제에서는 정부규제로 인해 경쟁압력이 없으므로 지대가 소멸하지 않음.
지대추구 행위 (rent seeking)	① 의미 : 국가가 승인한 독점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개인이나 기업이 획득·유지하기 위한 행위. 특정의 개인 및 기업이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정치인·관료와 결탁하여 각종 정부규제 및 해제, 법률제정 등을 요구·지시함으로써 그 사회의 다른 집단으로부터 부나 가치의 이전을 피하는 사회적으로 생산적이지 못한 로비활동. 예) 비관세장벽 획득을 위한 수입업자의 로비활동, 관세장벽 획득을 위한 국내생산업자의 로비활동, 관허사업을 따내기 위한 로비활동. ② 지대추구의 발생 원인 : 인·허가제 등 정부의 진입규제(경쟁적 규제)에 의한 독점권 부여에 있음.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정부가 시장 메커니즘에 개입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독점적 상황을 만들면 이로 인해 집중화된 경제적 편익인 독점지대가 발생하는데, 개인이나 기업이 이러한 편익(독점적으로 인·허가를 받을 경우의 이익)을 얻기 위해 정부가 시장메커니즘에 개입하도록(인·허가를 자신들에게만 해주도록) 로비활동 등을 벌임. 기업의 지대추구로 인해 독점권 획득과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뇌물·향응 제공 등 로비활동 자금)이 발생하며, 이는 기술개발 등 생산적 부분이 아닌 비생산적 부분에 사용된 사회적 낭비. 따라서 정부의 인허가제 운영에 따른 제도적 독점은 시장에서의 독점에 비해 사회적 후생손실(사회적 낭비)이 더욱 큼(털룩의 사다리꼴 ; Tullock Trapezoid).

- ③ (○) 파생적 외부효과(derived externalities) : 시장실패를 시정하려는 정부개입이 초래하는 예기치 않은 비의도적 잠재적 효과나 부작용을 뜻함(예)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을 추진했으나 정책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건축경기 과열화와 건축자재가격 인상, 건설비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서민주택난 가중. 정치인이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고위직 관료는 짧은 시계와 정책결정의 높은 시간할인율 때문에 파생적 외부성을 간과. 또한 정부산출물의 질과 양이 모두 정의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그 산출물이 낳게 되는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이나 동기가 위축됨. 파생적 외부효과를 극복하려면 정책결정자의 장기적 사고방식이 중요.

구분	의미	결과	대응책
외부효과	대가 없이 손해나 이익을 주는 현상	시장실패(과소·과다 공급)	외부경제 ⇨ 유인, 외부비경제 ⇨ 규제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발생	정부실패	정부보조삭감, 규제완화

- ④ (○) 행정조직의 내부성(internalities) - 조직 내부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불일치(괴리·유리[遊離]·절연[絶緣]), 사적 목표의 설정 : 모든 조직은 내부의 일상적 관리 및 운영관련 활동수행 지침(SOP, 예산분배규칙)이 필요하며, 시장(민간부문)의 경우 소비자의 반응, 손익분기점, 시장점유율 등 분명한 경영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행동하지만, 정부부문의 경우 행정활동의 무형성·추상성으로 인해 구체적·객관적 행동기준이 없으므로, 행정조직 스스로 지표(내부기준)를 개발하여 행동함. 행정활동에 관한 목표나 기준 설정시 사회적 목표(공익)보다는 관료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경우(목표전환) 사회전체의 목표와 조직 내부목표의 괴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행정조직의 내부성이라 함.

답 ①

13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의 경쟁적 규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가 소유한 희소한 자원에 대해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지정된 소수에게만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도록 규제한다.
 ② 선정된 승리자에게 공급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이들에게 규제적인 조치를 하여 공익을 도모할 수 있다.
 ③ 경쟁적 규제정책의 예로는 주파수 할당, 항공노선 허가 등이 있다.
 ④ 정책집행 단계에서 규제받는 자들은 규제기관에 강하게 반발하거나 저항하기도 한다.

해설

- ④ (×) 경쟁적 규제정책은 이익(서비스공급권 부여)과 규제가 동시에 이뤄지므로 보호적 규제정책에 비해 피규제집단의 반발·저항강도는 더 약하다.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규제정책 유형

경쟁적 규제정책	•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 권리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익을 위해 서비스 제공의 일정한 측면을 규제하는 정책. 진입규제에 해당되며, 지대추구(rent seeking)의 가능성이 큼. 예) 각종 인허가, 면허제도(고속버스노선허가, 방송국 설립인가,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의사면허) • 보호적 규제정책과 배분정책이 혼합된 혼합정책(Hybrid Policy)의 성격. 이익(서비스공급권 부여)과 규제가 동시에 이뤄지므로 보호적 규제정책에 비해 피규제집단의 반발·저항강도는 더 약하다.
보호적 규제정책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통제하여 일반대중을 보호하려는 정책(예) 식품·의약품 사전허가제, 근로기준설정, 최저임금제, 독과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음식점등 공중이용시설 금연, 남녀고용평등법 등). 공중에게 해로운 활동 및 조건은 금지되고 이로인 활동은 요구됨. 규제정책 중 대부분을 차지.

■ 정책유형에 따른 집행과정의 차이 - 리플리(R. Ripley)와 프랭클린(G. Franklin)

구분	배분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집행에 대한 논쟁과 갈등의 정도	낮음	보통	높음	높음
관료의 집행결정에 대한 반발의 정도	낮음	보통	높음	높음
집행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논쟁의 정도	낮음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정부활동의 감축을 원하는 압력의 정도	낮음	다소 높음	높음	높음
성공적인 집행의 상대적 어려움	낮음	보통	보통	높음
안정적 루틴을 통한 원만한 집행의 가능성	높음	보통	낮음	낮음
집행기관의 관여도, 주요 관련자들 간 동일성과 관계의 안정성	매우 높음	낮음	낮음	높음

답 ④

1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통합형은 행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② 기관통합형은 지방의회에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형태로,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 ③ 기관대립형 중 약시장-의회형은 시장의 고위직 지방공무원인사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반면, 시장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 ④ 기관대립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대립 및 마찰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해설

①②④ (○) ■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통합 여부 기준)

구분	기관통합형(의원내각제형·일원형[一元型])	기관대립형·기관분립형(대통령중심제형·이원형[二元型])
의미	권력통합주의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기능(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단일기관에 집중·귀속시키는 유형.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가 지방행정관료를 지휘하고, 자치사무를 집행. 보통 의회장이 자치단체장을 겸직.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정책 결정기능(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각각 분리하여 다른 기관에 분담시키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통해 자치행정을 수행함. 집행기관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형태.
채택 국가	전통적으로 주민자치형 국가에서 주로 채택 현재 영국·프랑스에서 주로 채택	전통적으로 유럽대륙의 단체자치형 국가에서 주로 채택 현재 일본·우리나라·이탈리아에서 채택
장점	① 지방행정의 권한·책임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집중되므로, 민주 정치와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 구현 용이(주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행정을 담당하므로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 ② 의결·집행기관 간 대립·갈등이 적으므로, 지방행정의 안정성·능률성(효율성) 확보 ③ 의결·집행기관의 단일화에 따른 정책효과의 극대화 ④ 소규모 기초자치단체에서 채택 용이	① 견제와 균형 원리 실현으로 권력남용 방지 ② 행정의 전문성 향상 ③ 단일 지도자를 통한 행정의 종합성·통일성 확보. 행정책임 소재가 명확 ④ 행정부서 간 분파주의의 배제 - 자치단체장에 의한 조정·통합
단점	①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정치의 이익 손상 ② 행정의 전문화·분업화 저해 ③ 단일의 지도자가 없어서 행정의 종합성·통일성 약화, 행정책임 소재의 불명확 ④ 지방행정이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됨. ⑤ 실·국 간 조정 곤란에 따른 할거주의(분파주의) - 의회의 정치적 파벌주의가 집행 부서 간에도 확산	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병존에 따른 비효율 ② 의결·집행기관 간 대립·갈등시 지방행정의 안정성·능률성 확보 곤란

- ③ (×)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이나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기관구성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시장-의회체제(Mayor-Council form)와 시지배인-의회체제(Council-Manager form)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약시장-의회형의 경우 지방의회가 고위직 공무원 인사권과 행정업무 지도·감독권(행정운영)을 지니며, 시장은 시민이 선출하지만 인사권, 거부권, 행정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구성 방식 중 시장-의회형(Mayor-Council Form) : 시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

㉠ 강시장 - 의회형(Strong Mayor-Council Form) : 시장은 소속직원 인사권, 예산안제출권, 의회의결 거부권 등 지방행정에 대한 책임과 통제권을 행사하며, 지방단위에서 내외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 의회는 법안의 제정, 예산안 의결 등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짐.

㉡ 약시장 - 의회형(Weak Mayor-Council Form) : 권력이 1인의 시장에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형태로 시장이 의회의장을 겸하는 기관협조형. 의회가 고위직 공무원 인사권과 행정업무 지도·감독권(행정운영)을 지님. 시장은 시민이 선출하지만 인사권, 거부권, 행정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시장 외에 많은 공직자(재정관, 검사, 전문위원회위원 등)를 시민이 직접 선출하므로 시장의 권한 범위가 매우 축소되어 있음.

㉢ 강시장 - 수석행정관[총괄관리관 : Chief Administrative Officer]형 : 강시장-의회형에 시장의 정치 및 정책결정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집행을 총괄하는 전문행정관(수석행정관)을 두어 시장의 행정능력을 보완. 시장이 임명한 수석행정관이 행정사무를 관장하므로, 시장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의회에 정책건의를 하며, 시 계획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전념할 수 있음.

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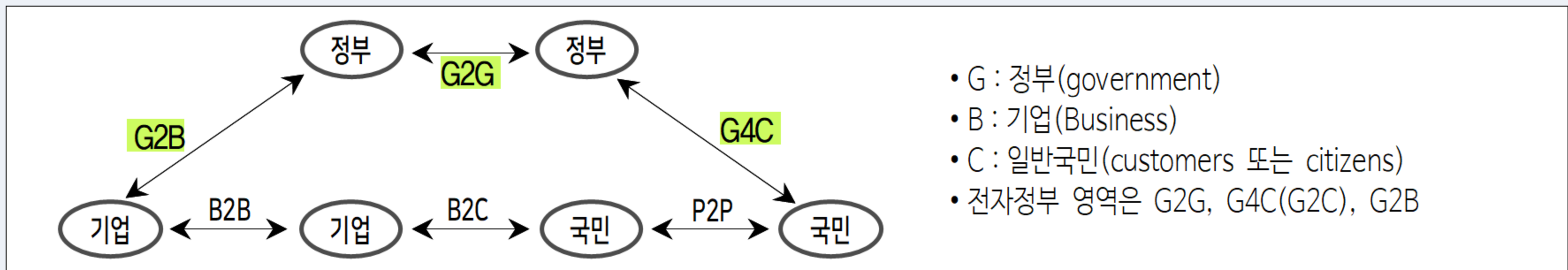
15 전자정부 구현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G2B'의 대표적 사례는 '나라장터'이다.
- ② 'G2C'는 조달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 ③ 'G4C'는 단일창구를 통한 민원업무혁신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공동활용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 ④ 'G2G'는 정부 내 업무처리의 전자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로는 '온-나라시스템'이 있다.

해설

- ① (○), ②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ONEPS;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나라장터) : GePS(Government e-Procure System), G2B(Government to Business)라고도 하며, 공공기관의 물품용역구매, 시설공사계약 등에 참가하는 업체의 등록과 입찰, 계약, 감수, 대금지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조달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③ (○) 정부24 : 대한민국의 서비스, 정책정보, 기관정보를 안내 받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신청·발급할 수 있음.
- ④ (○) 온나라시스템(On-nara BPS[Business Process System]) :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정부 부처, 정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정부 업무 처리 전산화 시스템. 과제수행계획부터 최종 의사결정에 이르는 업무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통합화·체계화하여 개별 공무원이 행하는 보고·의견제시·회의·지시사항 등 일체의 관련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추적·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상호작용관계에 따른 전자정부의 분류(G2G, G2B, G4C 또는 G2C)



- G : 정부 (government)
- B : 기업 (Business)
- C : 일반국민 (customers 또는 citizens)
- 전자정부 영역은 G2G, G4C(G2C), G2B

G2G(Government to Government)	G4C 또는 G2C(Government to Citizens)	G2B(Government to Busi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간 연계 확대와 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정확성 증대 및 거래비용 감소 • 그룹웨어시스템을 통한 원격지 연결, 정보 공유, 업무의 공동처리, 업무 유연성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 	정부와 시민의 연계를 정보화하여 시민참여 촉진과 공공서비스의 대응성·적시성 향상.	정부와 기업 간 연계의 정보화로 전자거래 촉진, 조달행정의 효율성·투명성 증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 : e-사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지식관리시스템(KMS), 정부통합전산센터, 온나라시스템(On-nara BPS : Business Process System),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GVPN : 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 : 정부가상가설망), smart work center(smart office), G-drive(범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민원포털(정부24, 구 민원24) • 경찰청 이파인(efine) - 교통민원24 • 국민신문고 • 홈택스 • 워크넷(work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ONEPS, GePS, 나라장터) • 전자통관시스템(Universal Pass : UNI-PASS)

답 ②

16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 직속 기획처 예산국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② 1961년 설립된 경제기획원은 수입·지출의 총괄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재무부는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③ 김영삼 정부는 1994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여 세제, 예산, 국고 기능을 일원화하였다.
- ④ 현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설

- ① (○)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재무부와 국무총리 기획처 신설. 기획처는 경제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 예산의 편성,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의 업무를 담당. 기획처 예산국이 중앙예산기관 역할을 담당. 재무부는 국가 세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국고 및 정부회계의 관리, 금융과 통화, 외환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수행.
- ② (×) 1961년 설립된 경제기획원은 중앙예산기관 기능, 재무부는 수입·지출 총괄기능(국고수지총괄)을 담당

• 예산관련기관의 연혁

구분	1948	1955	1961~1994 박정희 ~ 노태우	1994~1997 김영삼	1998.2~1999.5	1999.5~2008.2 김대중 ~ 노무현	2008.3~ 이명박
기획 기능	기획처 (국무총리 소속)	재무부 예산국	경제기획원 (국무총리 소속)	재정경제원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위원회 (대통령 소속)	기획예산처 (국무총리 소속)	기획재정부
중앙예산기관					재정경제부 예산청	재정경제부	
국고수지총괄기관	재무부	재무부	재무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답 ②

17 다음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태동한 행정학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월남전 패배, 흑인 폭동, 소수민족 문제 등 미국사회의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문의 무력함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났다.
- 1968년 미국 미노브룩회의에서 왈도의 주도 하에 새로운 행정학의 방향모색으로 태동하였다.

- ① 고객중심의 행정, 시민의 참여, 가치문제 등을 중시했다.
- ②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지향적 행정학을 요구하였다.
- ③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했으며, 논리실증주의 및 행태주의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 ④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사회적 형평을 실현해야 한다는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해설

③ (×) 제시된 내용은 신행정론이다. 신행정론은 행정이념으로서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했고, 반논리실증주의·탈행태주의의 주장을 지지(논리실증주의 및 행태주의의 주장을 비판)

신행정론 주요 특성

1. 학문적 성격: 기술성(art) 강조 - 사회의 변화를 위한 정책·가치·규범지향적 입장
 - ① 후기행태주의, 규범주의·가치주의(norm & value): 가치중립적·현상유지적·보수적인 행태론과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현실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치·규범·정책·철학·도덕 지향의 학문이어야 함을 강조.
 - 후기행태주의, 규범주의, 가치주의, 주관주의, 주의주의(主義主義), 2세대 행태론, 반실증주의, 탈경험주의
 - ② 사회적 적실성(social relevance)과 처방(action), 문제지향성
 - ㉠ 의사결정보다 문제해결을, 관리과학·체제분석보다 정책분석을 중시, 장기적·거시적·발전지향적 문제해결 지향. 현실사회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는 사회적 적실성 강조.
 - ㉡ 행정이론은 순수이론보다는 응용이론, 서술적이기보다 처방적, 가치중립보다 가치·목적 지향, 사회문제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기 위해 과학적이기보다 철학적이어야 한다고 주장.
 - 가치 지양(止揚), 가치중립 지향(指向) ⇨ 행태주의
 - 가치 지향(指向), 가치중립 지양(止揚) ⇨ 후기행태주의, 신행정론
 - ㉢ 정치·행정새1원론(행정범위의 확대 - 서구사회 큰 정부의 절정, 행정우위의 1원론), 공·사행정새2원론
2. 행정의 역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의 주도적 역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변동대응능력과 새로운 사회의 설계를 위한 변화담당자(change agent)로서의 능력 및 역할 강조.
3. 인본주의·민주주의 강조
 - ㉠ 기관·조직 지향(행정편의주의적 조직편제)보다는 수익자 지향성(고객중심행정; customer-oriented), 대응성(responsiveness)
 - ㉡ 참여와 분권,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조직 구성원과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강조하며, 참여를 통한 합의의 의사결정을 강조.
 - ㉢ 행정철학, 행정도덕, 공익 중시
4. 행정이념 -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중시: 행정은 구조적 사회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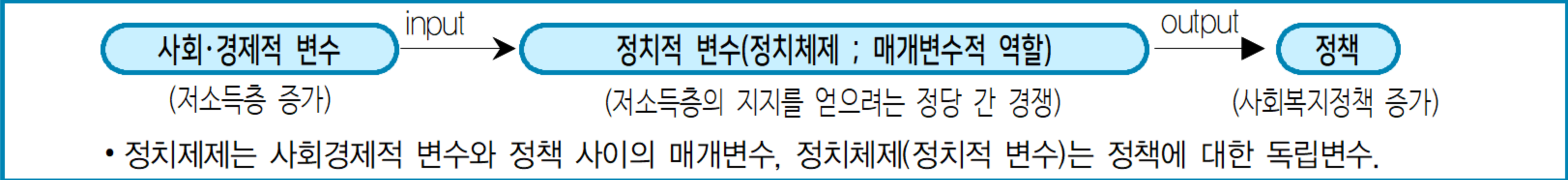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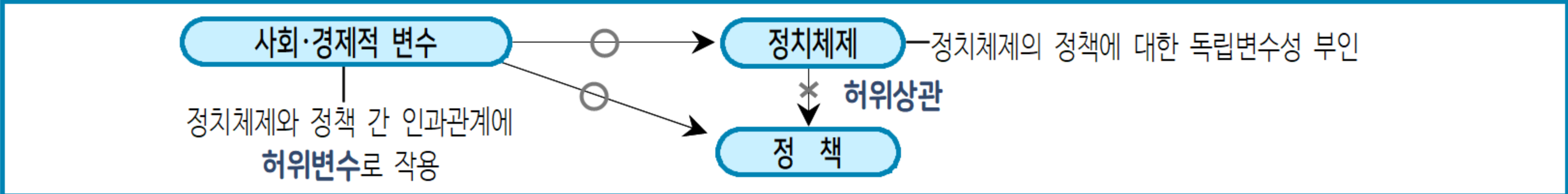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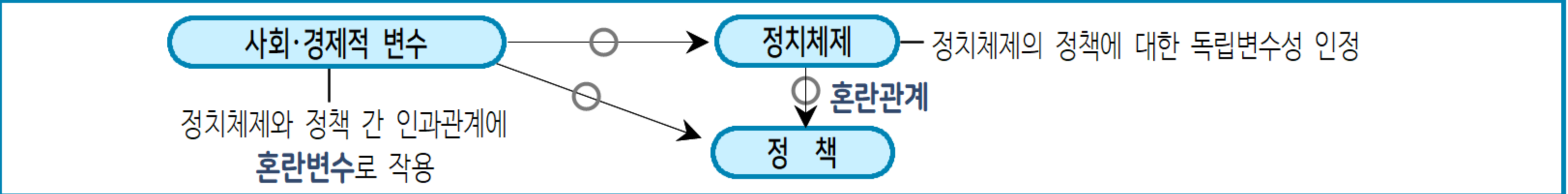
18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이론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② 도슨-로빈슨(Dawson-Robinson) 모형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치체제와 정책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 사회경제적 변수로 인해 정치체제와 정책의 상관관계가 유발된다고 설명한다.
- ③ 키-로커트(Key-Lockard) 모형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으로, 예를 들면 경제발전이 복지지출 수준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본다.
- ④ 루이스-백(Lewis-Beck) 모형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가 있고, 정치체제가 정책에 독립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해설

- ① (×) 정책결정요인론은 정책내용의 결정·좌우 요인이 환경으로부터의 투입(사회경제적 요인)인지 정치체제의 특성(정치적 요인)인지의 논쟁이며 **사회경제적 환경변수는 과대평가하고 정치적 변수는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 **도슨(R. Dawson)과 로빈슨(J. Robinson)의 경제적 자원모형**: 정치체제와 정책 간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데도(허위상관)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치체제와 정책 모두에 영향을 미쳐 정치체제와 정책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이라고 주장(사회 경제적 변수를 통제하면 정치체제와 정책 간 관계가 사라짐).
- ③ (×) **키(V. Key)와 로커드(D. Lockard)의 참여경쟁모형**: 정치체제는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책 사이의 매개변수라고 주장, 정치체제(정치적 변수)는 정책에 대한 독립변수로 작용하지만,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정치체제(정치적 변수)를 매개로 해서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
- ④ (×) **루이스 백(M. Lewis-Beck) 모형**: 은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적 변수, 복지지출 간 인과모형을 통하여 정치적 변수도 복지지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에 비하여 현저하게 작다는 사실을 발견.

답 ②

<div style="background-color: #ADD8E6; padding: 2px;"> ■ 정책결정요인론(Policy Determinants Theory) </div>									
의의	정책결정요인론은 정책의 내용을 결정 또는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이론. 정치체제는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환경으로부터 정치체제로 투입이 들어가면 전환과정을 거쳐 산출로서 정책이 나옴. 정책내용의 결정요인이 환경으로부터의 투입(사회경제적 요인)인지 정치체제의 특성(정치적 요인)인지의 논쟁이 정책결정요인론. 정책결정요인론은 정책을 종속변수로 보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무엇인지를 제시.								
전개 과정	① 초기 정치행정학자의 연구 ⇨ 정치적 결정요인론 ㉠ 정책을 단순히 정치체제의 산출물로만 파악하며, 환경의 투입내용에 따라 정책내용이 달라진다고 봄. ㉡ 체제론적 시각, 생태론적 접근, 비교행정·비교정치학 ㉢ 1940년대 키(V. Key)와 로커드(D. Lockard)의 참여경쟁모형 (세 가지 변수의 순차적 관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div> ② 경제학자의 연구 ⇨ 사회경제적 결정요인론 ■ S. Fabricant : 州 정부 재정지출규모는 환경적 요인인 사회경제적 요인(특히, 1인당 국민소득수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봄. ③ 정치학자의 재연구 : 도슨(R. Dawson)과 로빈슨(J. Robinson)의 경제적 자원모형 ⇨ 사회경제적 결정요인론 사회경제적 변수는 정치체제와 정책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복지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정치적 요인이 아니라 도시화·산업화·소득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며 사회경제적 요인은 정치적 변수에 의해 변화되기 어렵다고 봄. 정당 간 경쟁이라는 정치행정적 요인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허위(spurious)이며 정치체제는 환경으로부터의 전환과정을 담당하는 매개변수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봄. Key의 주장을 부인하고 오히려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지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div> ④ 너드(C. Cnudde)와 맥크론(D. McCrone)의 혼합모형(hybrid model) ⇨ 사회경제적 요인 + 정치적 요인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간접적으로는 정당 간의 경쟁과 참여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것. 정책에 따라서는 정치적 변수가 사회경제적 변수에 의한 허위상관을 제외하고도 정책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음을 증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div> ■ 다이(T. Dye) : 체제이론에 입각해 경제발전은 정치체제와 정책산출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정치체제도 정책산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단 도시화·소득·교육 등의 수준(사회·경제적 수준)이 정치체제의 특징(정치적 변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보인다고 주장. ■ 루이스-백(M. Lewis-Beck) :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적 변수, 복지지출 간 인과모형을 통해 정치적 변수도 복지지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이 훨씬 크다고 주장.								
영향	정치체제 변화 노력이나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점에서, 정책학의 학문적 가능성에 충격을 줌.								
한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background-color: #ADD8E6;">변수성정의 문제</td> <td> ㄱ 사회경제적 변수는 정책을 좌우하는 중요 변수들을 모두 포함 ⇨ 과대평가. ㄴ 정치적 변수는 정책을 좌우하는 정치체제의 특성이 포함되지 못함 ⇨ 과소평가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ADD8E6;">조작화·계량화 문제</td> <td>사회경제적 요인은 계량화가 용이한 변수를 이용, 정치적 요인은 계량화가 곤란해 연구에서 무시됨</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ADD8E6;">정책수준의 문제</td> <td> ㄱ 정책의 상위수준(총지출규모) ⇨ 국민소득수준(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음. ㄴ 정책의 하위수준(세부사업별 예산편성) ⇨ 정치적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음. 정책결정요인론은 정책의 상위수준 연구에 한정되어 정치적 변수가 경시됨. 예 저소득층 증가(사회경제적 변수) ⇨ 사회복지예산 50억 증대(상위수준 정책) ⇨ 노인복지, 이동복지, 여성복지, 근로자복지, 저소득층복지 등 하위수준의 정책에 분배할 예산액의 결정은 정치적 변수가 작용함.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ADD8E6;">인과관계의 불명확</td> <td>정치체제의 매개경로적 역할을 무시, 정치체제나 정책의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무시.</td> </tr> </table>	변수성정의 문제	ㄱ 사회경제적 변수는 정책을 좌우하는 중요 변수들을 모두 포함 ⇨ 과대평가. ㄴ 정치적 변수는 정책을 좌우하는 정치체제의 특성이 포함되지 못함 ⇨ 과소평가	조작화·계량화 문제	사회경제적 요인은 계량화가 용이한 변수를 이용, 정치적 요인은 계량화가 곤란해 연구에서 무시됨	정책수준의 문제	ㄱ 정책의 상위수준(총지출규모) ⇨ 국민소득수준(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음. ㄴ 정책의 하위수준(세부사업별 예산편성) ⇨ 정치적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음. 정책결정요인론은 정책의 상위수준 연구에 한정되어 정치적 변수가 경시됨. 예 저소득층 증가(사회경제적 변수) ⇨ 사회복지예산 50억 증대(상위수준 정책) ⇨ 노인복지, 이동복지, 여성복지, 근로자복지, 저소득층복지 등 하위수준의 정책에 분배할 예산액의 결정은 정치적 변수가 작용함.	인과관계의 불명확	정치체제의 매개경로적 역할을 무시, 정치체제나 정책의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무시.
변수성정의 문제	ㄱ 사회경제적 변수는 정책을 좌우하는 중요 변수들을 모두 포함 ⇨ 과대평가. ㄴ 정치적 변수는 정책을 좌우하는 정치체제의 특성이 포함되지 못함 ⇨ 과소평가								
조작화·계량화 문제	사회경제적 요인은 계량화가 용이한 변수를 이용, 정치적 요인은 계량화가 곤란해 연구에서 무시됨								
정책수준의 문제	ㄱ 정책의 상위수준(총지출규모) ⇨ 국민소득수준(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음. ㄴ 정책의 하위수준(세부사업별 예산편성) ⇨ 정치적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음. 정책결정요인론은 정책의 상위수준 연구에 한정되어 정치적 변수가 경시됨. 예 저소득층 증가(사회경제적 변수) ⇨ 사회복지예산 50억 증대(상위수준 정책) ⇨ 노인복지, 이동복지, 여성복지, 근로자복지, 저소득층복지 등 하위수준의 정책에 분배할 예산액의 결정은 정치적 변수가 작용함.								
인과관계의 불명확	정치체제의 매개경로적 역할을 무시, 정치체제나 정책의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무시.								

19 공직부패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허가 업무처리시 소위 ‘급행료’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일탈형 부패라고 한다.
- ②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권력형 부패라고 한다.
- ③ 공금 횡령, 회계 부정 등 거래 당사자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부패를 사기형 부패라고 한다.
- ④ 사회체제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잠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는 반면, 다른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회색부패라고 한다.

해설

① (×) 제도화된 부패이다.

■ 제도화된 부패(체제적 부패)(institutionalized corruption, systemic corruption)

- ① 의미 : 부패가 일상화·제도화·관습화되어 행정체제 내에서 부패가 실질적 규범이 되고 바람직한 행동규범은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되는 경우. 적발되어도 관대한 처분을 받으며 공식적 행동규범을 고수하는 사람이 오히려 제재를 받고, 부패가 생활양식화 되어 큰 죄의식 없이 이루어짐(예) 관행화된 급행료).
- ② 특성
 - ㉠ 형식주의 : 반부패선언을 대외적으로 표방은 하지만, 조직 내에서는 사실상 위반을 방조·은폐함.
 - ㉡ 부패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 반부패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사람이나 부패를 폭로하려는 사람은 보복을 당하는 상황. 조직적 은폐로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음.
 - ㉢ 부패행위자의 보호와 관대한 처분 : 부패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관대한 처분.
 - ㉣ 부패의 타성화 : 조직 내의 전반적 관행을 정당화함으로써 집단적으로 죄책감을 해소하며, 강력한 외적 압력이 없는 한 부패를 중단하려하지 않음.
 - ㉤ 통제자의 책임 회피 : 부패 적발의 공식적 책임자가 공식적 책무 수행을 꺼림.

■ 일탈형 부패(우발적 부패)

부정적 관행이나 구조보다 개인의 윤리적 일탈에 의해 발생하는 부패로서 연속성이 없고 구조화되지 않은 일시적 부패(예)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단속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 크게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보통이지만, 규모가 크거나 권력자가 개입된 경우 제도화된 부패처럼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음.

답 ①

2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집행 모형을 제시한 학자는?

-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정책내용으로서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체크리스트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 정책집행 현장의 일선관료들이나 대상집단의 전략 등을 과소평가하거나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① 사바티어(Sabatier)와 마즈매니언(Mazmanian) ② 린드블럼(Lindblom)
- ③ 프레스만(Pressman)과 윌다브스키(Wildavsky) ④ 레인(Rein)과 라비노비츠(Rabinovitz)

해설

제시된 내용은 정책집행의 하향적 접근이며 사바티어(Sabatier)와 마즈매니언(Mazmanian)은 하향적 집행론을 주장한 학자이다(나중에 사바티어는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 첫번째 지문은 이들이 제시한 효과적 정책집행을 위한 이상적 조건에 관한 내용이다.

■ 효과적 정책집행을 위한 이상적 조건(하향적 접근) - 사바티어(P. Sabatier)와 마즈매니언(D. Mazmanian)

- ㉠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일 것
- ㉡ 정책내용으로서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지니며, 대상집단의 순응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법적 구조화).
- ㉢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할 것.
- ㉣ 결정된 정책에 대해 조직화된 이익집단, 유권자, 입법가, 행정부의 장으로부터 지속적 지지를 받을 것
- ㉤ 정책목표는 안정적이어서, 집행과정 동안 법령에 규정된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하며, 상충되는 정책이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기존의 정책이 현저하게 달라지지 않을 것

하향적 집행론자들이 제시하는 효과적인 집행조건은 정책결정자에게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예측하는 점검목록(checklist)이 된다. 하향적 집행론은 정책집행 현장의 일선관료들이나 대상집단의 전략 등을 과소평가하거나 정책결정자만 주요 행위자로 보므로 일선 집행관료들의 능력과 정책대상집단의 반응, 반대세력의 전략과 입장 등 집행현장에서 중시되는 요소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숲은 보되 나무를 보지 못함)

답 ①

21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시 법률의 구체적 위임은 없었으나 청주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었다.
- ② 청구에 의한 공개도 가능하지만 특정 정보는 별도의 청구 없이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 ③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④ 정보목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도 공공기관이 작성, 공개하여야 한다.

해설

이하 법률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① (○)

- ㉠ 1992년 청주시가 최초로 정보공개조례 제정(청주시의회가 재의결한 정보공개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이 제정되었다며 청주시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본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로 하지 않다고 하여 합헌으로 판결). 이후 여러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 ㉡ 1994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정
- ㉢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1998년부터 시행

② (○)

개념구분		법적 성격	대상자	유형·수단
정보공개 (廣義)	정보공개청구제도 (狹義)	법적 의무	특정 청구인	정보공개법 - 정보공개청구
	의무적 정보공표	법적 의무	불특정 다수	정보공개법 제7조·제8조의2, 공고·고시·법령공포
	정보제공	자발적 제공	불특정 다수	홍보·자료실

·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 정보공개 대상 규정 - 네거티브 방식 : 원칙 공개 / 예외적 비공개 ⇨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①항에 명시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답 ④

22 신고전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직군생태론, 자원의존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 ② 인간을 복잡한 내면구조를 가진 복잡인으로 간주한다.
- ③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적·동태적·유기적 조직을 강조한다.
- ④ 조직 내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고, 조직의 비공식적 구조나 요인에 초점을 둔다.

해설

- ① (×) 구조적 상황이론, 조직경제학(대리인이론·거래비용이론), 자원의존이론, 조직군생태학 등 거시조직이론은 현대적 조직론에 해당.
 - 신고전적 조직이론 : 인간관계론, 환경유관론(조직을 조직환경에 적응적인 유기체로 간주)
- ② (×) 신고전적 조직이론의 인간관은 사회인관 / 현대조직이론의 인간관은 자아신현인관, 복잡인관
- ③ (×)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폐쇄체제관 또는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는 환경유관론을 특징으로 함. 현대적 조직이론은 조직을 환경과 동태적·유기적 개방체제로 파악.

■ 조직이론의 변천과정 (새행정학 3.0(이종수 외 공저) p.154~156)

고전 조직이론	과학적 관리론을 배경으로 성립된 기계적 조직관으로, 1930년대 완성된 정치·행정이원론과 행정관리론의 입장에서 행정을 규명하던 시기의 전통 조직이론.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 페이올(H. Fayol)의 일반관리론, POSDCORB와 조직 원리를 제시한 굴릭(L. Gulick), 어윅(L. Urwick), 윌슨(W. Wilson) 등이 주도한 행정관리학파,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이론 등이 이에 해당 ① 단일 가치 기준으로서 능률 추구 ② 조직 속의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간주 ③ 공식적·합리적 구조와 과정을 중시 ④ 조직을 폐쇄체제로 파악.
신고전 조직이론	고전조직이론이 전제한 기계적 조직관과 합리적 경제인에 대한 반발로 등장. 메이요(E. Mayo)에 의해 1930년대에 호손공장 실험이 행해지고 호손실험의 결과를 중심으로 등장한 인간관계론과 후기 인간관계론이 신고전조직이론에 해당. 메이요(E. Mayo), 페이올(H. Fayol), 바나드(C. I. Barnard) 등이 대표적인 학자다. ① 조직 내 사회적 능률을 강조 ② 사회적 인간관

	③ 조직의 비공식적 구조나 요인에 초점 ④ 폐쇄체제 또는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는 환경유관론
현대 조직이론	개인을 다양한 욕구와 변이성을 지닌 자아실현인·복잡인으로 간주. 상황론적 조직이론, 조직경제학(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과 자원의존이론, 조직군생태론 등이 있음. ①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태적·유기체적·개방체제로 파악 ②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 주장 ③ 인간 행태나 발전적·쇄신적 가치관 중시, 인간을 자아실현인·복잡인으로 파악 ④ 가치의 다원화 및 행정 현상의 다양성 인정 ⑤ 조직에서 변동·갈등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조직발전 중시 ⑥ 효과성·생산성·민주성·대응성·사회적 적실성과 종합적인 행정개혁 중시 ⑦ 종합 과학적 성격

답 ④

23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배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이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은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 공통된 사무이다.
- ④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는 시·도의 사무이다.

해설

- ① (×)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 | |
|---------------------------------|------------------------------|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

1. 시·도

-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답 ①

24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제헌의회가 성립하면서 1949년 전국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 ② 1991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 ③ 1995년부터 주민직선제에 의한 시·도교육감 선거가 실시되면서 실질적 의미의 교육자치가 시작되었다.
- ④ 1960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장·도지사 선거는 실시되었으나, 시·읍·면장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해설

- ① (×)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1952년 시·읍·면·도 의회 의원 선거
- ② (○) 노태우 정부는 지방자치 부활 후 지방의회의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해야 했으나 법률을 어기고 1991년 지방의원 선거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음(지방권력 기반 상실을 우려해 일부러 실시 안 함).
- ③ (×)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 교육감선거는 주민 직선으로 전환.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고 있다.
- ④ (×) 1960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도지사·시·읍·면장을 주민직선.

▣ 지방선거 연혁

시기	1공화국		2공화국	6공화국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이후
지방선거	1차(1952)	2차(1956)	3차(1960)	4차(1991)	5차(1995)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12차(1998~2022) 2~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의회	1대 지방의원(시·읍·면·도) 직선	2대 지방의원 직선	3대 지방의원 직선	4대 지방의원 직선	5대 지방의원 직선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4년마다 직선
지방자치 단체장	특별시장·도지사는 대통령 임명, 시·읍·면장은 의회 간선	직선(시·읍·면장)	직선(서울특별시·도지사·시·읍·면장)	자치단체장 선거 미 실시	직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답 ②

25 다음은 정책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과 그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일선 집행관료는 큰 저항을 하지 않으나 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는 대상집단은 의도적으로 불응의 핑계를 찾으려 한다.
- ㉡ : 도덕적 자각이나 이타주의적 고려에 의해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사람들의 명예나 체면을 손상시키고 사람의 타락을 유발할 수 있다.
- ㉢ : 불응의 형태를 정확하게 점검 및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약점이 있다.

	㉠	㉡	㉢
①	도덕적 설득	유인	처벌
②	도덕적 설득	처벌	유인
③	유인	도덕적 설득	처벌
④	처벌	유인	도덕적 설득

해설

▣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 확보 전략

정정길 교수	유훈 교수
도덕적 설득(normative persuasion)	정보전략(information)
유인(incentives) 또는 보상(rewards)	유인전략(incentive)
처벌(punishment or penalty) 또는 강압(coercion)	규제전략(regulation)
	촉진전략(facilitation)

설득전략 (도덕적 설득) -규범적 방법	정책의 당위성을 도덕적·윤리적 차원에서 홍보하여 심리적으로 설득하는 방법. 비용이 적게 들고 대상집단의 심리를 변화시켜 순응하게 하므로 순응주체의 BC분석에 의한 행태를 극복. 일선집행관료는 원래 정책집행을 해야 할 도덕적·윤리적 책임이 있으므로 큰 저항이 없지만 민간의 피규제자들은 설득이 어렵고, 이들은 행정기관의 정통성과 신뢰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의도적인 불응의 핑계를 찾으려 함. ※ 정보전략은 대상집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응을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설득전략의 의미와 일부 유사.
유인전략 (보상) -공리적 방법	순응의 이익을 높임. 순응시 보조금·세금감면 등 유인(incentive) 제공. 순응 여부가 순응주체의 자발적 선택에 맡겨지며 분권적 체제에 효과적임. 금전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집행 비용 증가. 도덕적 자각이나 이타주의적 고려에 의해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사람의 명예·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을 타락시킬 가능성이 있음(돈 받고 순응). 경제적 유인이 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순응에 작용한 다른 요인을 파악하기 어려움).
규제전략 (처벌·강압) -강제적 방법	불응의 비용을 높임. 불응시 처벌이나 처벌의 위협을 가함(벌금·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 징역 등 신체형, 허가 취소나 보조금 중단 등 기존 이익의 박탈). 비용이 적게 들지만 개인의 인권·재산을 침해하고 저항·도피를 초래. 감정적 적개심을 유발시켜 처벌만 없으면 불응을 쉽게 하도록 하는 심리적 역효과 초래. 불응 형태를 정확하게 점검·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불응이 없는데 착각하여 처벌시 문제가 됨).
촉진전략	순응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석하고 관리·지원. 대상 집단의 순응을 용이하게 하고 비용·시간 등의 부담을 감소시킴. 예) 주민들이 순응에 필요한 서류를 쉽게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

답 ①